

## 이재용 법정구속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집유 석방 1078일 만에 재수감  
‘또 충수 부재’ 삼성 충격에 빠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1078일 만에 재수감되자 삼성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4면

최저징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지만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경영진이 가담한 뇌물과 횡령 범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 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주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hn@

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

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총 86억여 원이 됐다. 김준용 기자 deep@

## ‘주택정책 실패’ 인정한 文 “설 전에 특단 공급대책 발표”

문·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

“투기방지 역점...안정화 성공 못해”  
“사면 논의할 때 아니다” 선 그어  
‘입양아동 교환’ 발언 논란 빚기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며 “정치할 목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5·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방안을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

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은 국민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

한미·한중 동맹의 중요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며 “한미 관계는 외교·안보에 있어 특별한 동맹 관계”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북한 문제는 미국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의 교류 강화를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자체는 위촉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공정위 ‘구글 제재’ 정조준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  
플랫폼 부당행위 감시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ICT전담팀 아래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 스마트폰에서 앱을 판매하는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행위(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 신설된 ICT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중점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나뉘었던 감시분과가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변경됐다. 앱마켓과 O2O플랫폼 분과가 신규 개설된 것이다.

앱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

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이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경쟁 앱마켓 탑재 방해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관련 안전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인상기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배달·숙박업으로 대변되는 O2O플랫폼 분과에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상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빅데이터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정부, 전기차 배터리서 데이터 확보... ‘안전 모니터링’ R&D 시작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체 전기차 배터리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이를 근거로 ‘화재 징후’를 포착해 과충전 방지 및 서비스 점검 명령 등을 내려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12면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이 시작됐다.

최근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5~10월 대구와 제주에서 3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충전 중이거나 주차하다 일어난 사고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배터리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터리의 충전과 소모(부하), 온도 변화 등을 데이터로 수집한다. 배터리 충전시 배터리 온도 변화, 운행방식 등의 자료

를 수집하면 이를 분석해 화재사고 사전 징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은 교통안전공단이 주도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전기차 제조사 및 배터리 제작사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이라는 국민 안전 개념을 넘어 산업계의 연구개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의 청사진과 궁극적 개발 목표 등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수집 데이터 항목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굿바이 차이나’... 中 사업 줄이는 재계

현대기아차, 中 생산·판매 감소  
인도 등 최대 해외 거점 중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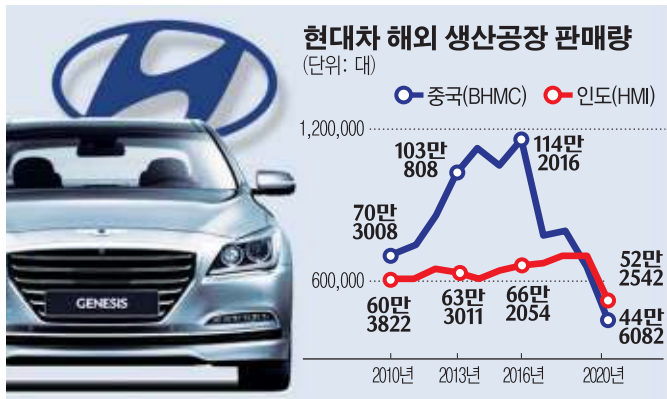
삼성전자, 헝진 TV공장 가동 중단  
SK종합화학, 패키지 사업 축소

국내 기업에 중국 사업장이 차지하던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은 최대 생산·판매 거점 지위를 내려놓았고, 삼성전자나 SK종합화학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탈(脫)중국 대열에 섰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는 인도 공장이,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대표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해외 공략을 이끌었다.

지난해 현대차는 인도·터키·중국(북경 현대)·미국·체코·러시아·브라질·베트남 등 8곳의 완성차 생산 공장에서 총 205만 9776대를 판매했다. 이 중 중국 공장은 44만 6082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판매량 2위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해 판매한 곳은 인도 공장(52만 2542대)이었다.

2002년 준공한 중국 공장은 2009년에 연간 판매량 57만 대를 넘어서며 현대차 해외 생산 기지 중 가장 많은 완성차를 판



매하는 공장으로 올라섰다. 중국 공장은 이후 2018년까지 10년 연속 현대차의 최대 해외 거점이 됐지만, 2019년 처음 2위로 내려선 뒤 지난해에도 순위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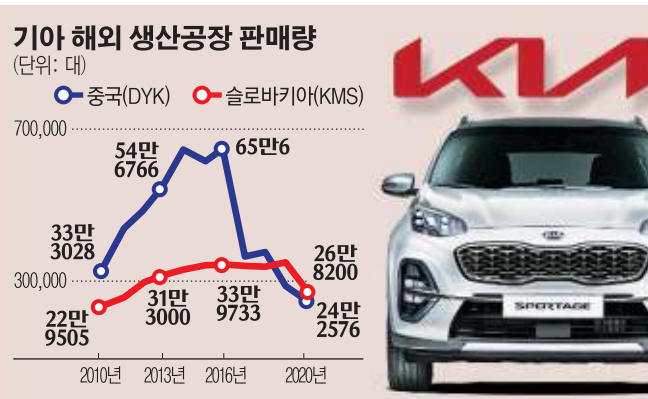
기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중국(동풍열달기아)·슬로바키아·멕시코·인도 등 5곳에서 완성차 공장을 가동하는 기아는 지난해 총 111만 7832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이 가운데 중국 공장은 24만 2576대를 팔며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26만 8200대를 판매한 슬로바키아 공장이었다.

중국은 2002년 기아가 설립한 첫 번째 해외 생산기지로, 2018년까지 17년 연속 기아의 최대 수출기지 역할을 책임졌다. 하지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 처음으로 슬로바키아 공장에 밀려 판매량 2

위로 내려선 뒤 지난해에도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이 최대 생산·판매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건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현지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판매 부진이 지속되자 2019년에 현대차는 베이징 1공장 가동을 멈췄고, 기아는 연경 1공장을 폐쇄했다.

삼성전자도 중국에 남은 마지막 헝진 TV 생산기지 가동을 올해부터 중단했다. 중국 후발 업체들의 추격으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생산을 멈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말 헝진 스마트폰 공장, 2019년에는 광둥성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도 가동을 멈췄다.



SK종합화학은 중국 계열사의 지분 매각에 나섰다. 7월 중으로 저장 선신 SK 패키징(Zhejiang Shenxin SK Packaging Co. Ltd.)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기업은 중국에서 농약병 등 다중용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법인이다.

중소기업들도 탈중국 대열에 서 있다. 2013년 국내 기업 유턴법(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80개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었다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인건비와 정부의 편의적인 규제 리스크 등이 탈중국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CJ그룹 2세’ 이선호 제일제당 부장 복귀

CJ그룹 2세  
이자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사진)  
부장이 돌아왔다.  
1년 4개월  
만이다.



CJ그룹은 이선호 씨가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부장으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이선호 부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복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를 넘긴 이날 CJ제일제당에 첫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이 복귀한 글로벌비즈니스 담당은 CJ그룹의 비전인 ‘월드베스트 CJ’ 최일선에 있는 부서다. 월드베스트 CJ는 2030년까지 3개 이상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이다. 미국의 슈완스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춘 CJ제일제당은 연간 매출 22조원대를 기록하며 식품 10대 기업 매출과 맞먹는 외형을 자랑하고 있다. 이 부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으로 CJ제일제당의 해외사업을 진두지휘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장은 2019년 9월 마약 밀수 혐의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누나인 이경후 CJENM 상무가 지난해말 인사에서 부사장대우로 승진하면서 재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부장의 복귀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봤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이 부장은 남매 동반 승진 기회에서 배제된 후 글로벌 전략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복귀하게 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트럼프 지우는 엘런... “약달러 추구 안 해”

바이든 행정부 경기부양 예고  
달러 가치 반등 가능성은 낮아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을 뒤집을 전망이다.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열릴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달러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95년 이후 1998년과 2000년,

2011년 등 세 차례만 환율 시장에 개입하며 25년간 달러화 가치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취임 전부터 줄곧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자고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2019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은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018년 “약달러가 미국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외환시장을 뒤흔들기도 했다.

반면 옐런은 달러화 가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할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차기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적인 경기 부양 모드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만큼 달러 가치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작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1조 9000억 달러(약 2082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공개하며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림 기자 rog@

THE HYUNDAI

# 2021

## THE HAPPINESS

### 더 행복한 일상이 찾아 올 새해

#### 현대백화점이 함께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앱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원하는 장소, 원하는 때 가장 편리하게 세일 상품과  
설 선물을 주문·배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25 OPEN)

**신년세일** 1. 18 - 1. 31  
300여 개 브랜드 세일 & 시즌오프  
현대백화점카드 6개월 무이자 / 현대백화점상품권 증정 혜택

**설 선물 상품전** 1. 25 - 2. 11  
970여 개 상품 최대 10~70% 할인

설 선물 디지털 특선집  
모바일로 편리하게 선물을 준비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H.Point 앱 설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연세점 | 한성 | 더한성닷컴 | H패션몰 | 현대리바트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 실형→집유→실형

<1심> <2심> <파기환송심>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칼을 갈았다.

특검은 삼성의 청탁과 거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에 이뤄진 특혜 정황도 포착했다. 한 달 만에 특검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이 부회장은 전격 구속됐다.

그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 경영권 승계 특혜 정황 포착 전합, 후원금 50억 뇌물 추가 인정  
李 “본질은 前 대통령 직권 남용”

1심은 8월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면서 묵시적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수 433억 원 중 89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해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을 무죄로 보면서 뇌물 인정액은 36억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일지

|      |                                            |
|------|--------------------------------------------|
| 2016 | 10월 24일 JTBC ‘최순실 국정농정 개입 의혹’ 보도           |
|      | 12월 21일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      | 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      | 28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
| 2017 |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 2018 | 2월 5일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 2019 | 8월 29일 대법 전합, 이재용 부회장 2심 파기환송              |
| 2020 | 12월 30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
| 2021 |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혐의별 판단

|           | 1심<br>2017. 8. 25 | 2심<br>2018. 2. 5 | 대법원<br>전원합의체<br>2019. 8. 29 | 파기<br>환송심<br>2021. 1. 18 |
|-----------|-------------------|------------------|-----------------------------|--------------------------|
| 뇌물·횡령액    | 36억 원             | 36억 원            | 36억 원+50억여원                 | 86.8억 원                  |
| 말 구입비     | 34억 원             | 34억 원            | 34억 원                       | 34억 원                    |
| 발보원로      | 2억4000만 원         | 2억4000만 원        | 2억4000만 원                   | 2억4000만 원                |
| 영재센터      | 16억 원             | 16억 원            | 16억 원                       | 16억 원                    |
| 미르·K재단 뇌물 | 무죄                | 무죄               | 무죄                          | 무죄                       |
| 재산 국외도피   | 유죄                | 유죄               | 유죄                          | 유죄                       |
| 뇌물·횡령액    | 89억 원             | 36억 원            | 36억 원+50억여원                 | 86.8억 원                  |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총 86억여 원으로 다시 늘었다.

파기환송심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

판은 9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준법감시위를 살펴본 재판부는 결국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에 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고 방청석 쪽을 힐끔힐끔 보다가 하면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고개를 끄덕인 뒤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준 마지막 발언 기회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부회장을 대리한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정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법정형 절반… 작량 감경 통한 선처

朴 전 대통령 뇌물 ‘적극적 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행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와 관련한 부분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감경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준법감시 제도를 강화한 사

정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모두 다뤄본 이후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제야 준법감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 제도의 본질은 위법 행위의 예방에 있는데 감형을 받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도 항소심 재판 중 준법감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을 ‘적극적 공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해 단순한 수동적 공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재계 ‘탄식’ vs 노동계 ‘환영’ 엇갈린 반응

주요 외신, 구속 상황 앞다퉈 보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와 노동계 등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주요 외신도 이 부회장 구속 상황을 앞다퉈 보도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

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특검 구형량에 비해 낮은 선고형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경제계를 향해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마라”고 촉구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전자기업의 최고 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 수감됐다”면서 “장기적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 리더십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영 기자 kdy@·변효선 기자 hsbun@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 ‘슈퍼사이클’ 오는데… 삼성 ‘반도체 전략’ 급제동

3년 만에 리더십 공백… TSMC 추월 ‘세계 1위’ 목표 차질  
대규모 투자·채용·M&A 등 선제적 의사결정도 위축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삼성이 다시 ‘세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2017년부터 이어온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5년째 접어들어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이 부회장의 공백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채용, 기업 인수·합병(M&A) 등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 전반적으로 정체가 우려된다.

반도체 사업은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반도체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이어 모바일 반도체까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삼성의 반도체 추가 투자와 증설, 생산 전략은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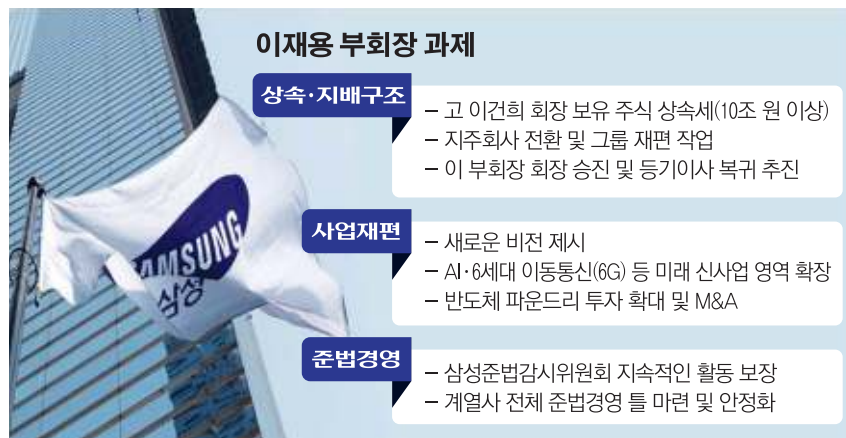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M&A로 몸집을 불리고 기술을 확보하는 사이 삼성은 오히려 리스크에 공격적 행보를 보

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 만 엔비디아의 ARM 인수, AMD의 자일링스 인수,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부 인수 등 굵직한 반도체 ‘빅딜’이 나왔다. 퀄컴의 뉴비어 인수 추진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업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 분야도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주춤한 상황에 삼성 입지를 좁혀줄 기회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2분기 20%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화웨이는 11%까지 떨어졌다. 시장 순위도 2위에서 4위로 급락하며, 애플과 샤오미에 밀렸다.

총수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삼성이 갑자기 흔들릴 가능성은 적지만, 삼성의 중장기적 미래를 봤을 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 2017년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부터 새로운 대형 M&A(빅딜)를 단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



장이 처음 구속되기 3개월 전에 자동차 전장업체 미국 하반을 인수한 이후 ‘빅딜’은 실종 상태다.

이 부회장의 해외 인맥 자산을 활용한 경영 활동도 공백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래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 등과 교류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던 2019년 7월에는 이 부회장이 일본으로 직접 날아가 일본 제재와 소재·부품 기업을 찾아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 공급 확

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업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본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막 등을 앞둔 시점에 삼성의 리더십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누 삼성’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회사를 재장비해 왔는데 이 역시 멈추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제적 결정들이 필요한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의 행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삼성 관련주의 낙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충격의 삼성그룹 28兆 증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동학 개미의 주식자산 평가액이 하루 만에 28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기업 총수가 연결된 이슈인 만큼 말을 아끼긴 했지만 “오너 리스크는 단기로 끝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사태에서 예상 밖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 23개 상장사의 이날 시가총액은 77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15일 종가 기준 803조5000억 원보다 27조9000억 원이 줄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3.41%(3000원) 빠지며 1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25조3000억 원에서 이날 507조4000억 원으로 18조 원이나 줄었다. 삼성물산의 주가는 6.84%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28조7000억 원에서 26조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삼성 SDI 역시 이날 주가가 4.21% 하락해 시총이 50조7000억 원에서 48조5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삼성엔지니어링(-3.65%), 삼성 SDS(-3.19%)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는다. 기업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오히려 리스크의 핵심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SK·한화·CJ 등은 오히려 부채 때마다 ‘인수합병(M&A)에 차질을 빚는다’, ‘지배구조 개편이나 투자 결정이 미뤄진다’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선장 잃은 삼성號 ‘비상경영’

정현호 사장 ‘사업지원TF’ 중심 계열사 각개전투 불가피

법원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삼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기대했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대거하던 삼성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한 채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이 부회장을 응원하던 사람 중 일부는 큰소리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 측 이인재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은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체제 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비상경영’이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 삼성은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재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은 한동안 계열사별 각개전투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총수 구속으로 어수선한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업지원 TF에 대한 일각의 시선이 굵지 않은 탓에 적극적으로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컨트롤 타워도 없는 상황에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룹 전반

에 걸친 핵심 사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일상적 경영은 CEO(전문경영인)선에서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결정은 결국 총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은 수년 전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현상 유지’는 곧 ‘도태’를 의미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도 간접적으로 경영을 챙기겠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기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역적 박진' 만들기  
PART3. P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전통 정원의 멋  
김주목 화가  
오직 '나'와 '독'하고 싶어 지는 집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토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재미있는 성 인문학  
사시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서 유행이다. 그런데 정말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행'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적합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라기까지 하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라며,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와 명망이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라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막  
악사가 알려주는 악곡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대규모 주택공급 준비”…고밀 개발에 무게

도심 역세권개발·공공재개발 거론  
민간사업 선호하는 시장과 엇박자  
기존 투기 억제 정책은 유지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 개발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투기 방지 역점 뒀으나 부동산 안정 성공 못 해” =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11일 신년사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낸 요인으로 늘어난 유동성과 가구 수 급증 두 가지를 꼽았다. 저금리 기조와 확대 재정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1·2인 가구가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주택이 부족해졌다는 인식에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만 명 넘게 줄었지

| 설 전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은?                                     |  |                                                 |  |
|--------------------------------------------------------|--|-------------------------------------------------|--|
| 공공 소규모 재건축                                             |  | 역세권 고밀 개발                                       |  |
| 공공기관 참여, 임대주택 기부 채납 전제로 노후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건축에 용적률 등 규제 완화 |  | 용적률 규제 완화하는 역세권 범위 확대, 서울 전철 역 전역서 역세권 개발 사업 허용 |  |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확대                                         |  | 유류부지 개발                                         |  |
| 3월 중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연내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                |  | 철도역사 등 유류부지 복합개발                                |  |

만 가구 수는 61만 가구 늘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부·여당이 주택난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 수 증가는 이미 장기적인 현상이었다”며 “지난해 가구 수가 급증한 건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개정으로 가구 분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하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변창흠표 고밀 개발, 힘 실은 대통령 =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공공 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며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

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선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철도 부지 등 새로 주택을 공급할 택지 후보 물색도 한창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 등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평소 한 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와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에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두고 시장에서 기대와 냉소가 엇갈린다.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정비사업을 선호하는 시장 수요와는 거리가 있어서다. 개발 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재개발 사업은 흥행한 반면 공공 재건축은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재건축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심 교수는 “대규모 공공 주도 개발을 하면 주택 공급은 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민간 수준의 좋은 주택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책 발표부터 분양, 입주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5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와도 당면한 주택난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말 변 장관은 취임 이후 공급 확대 기조를 꾸준히 밝히고 있지만 전국 주택 가격은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 완화엔 선 그은 정부 =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세제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부동산 정책 합동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기(既)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기조가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으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설(說)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박종화 기자 pbell@

## “11월 집단면역 목표로 9월까지 1차 백신 접종”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의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라며 “만에 하나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 발생의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월까지의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며 “일부 남은 2차 접종,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 접종을 마쳐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보급의 한계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이유로 올해 안으로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신 도입이 늦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WHO의 전망은 백신이 선진국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할 만큼 접종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도입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7·9월, 3분기에는 많은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번의 접종과 국민 60~70%가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목표로 잡았다”고 부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전문가 “경영진에 배임 강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 지금한다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

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낙연표 이익공유제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국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어긋나고 세금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익공유제는 (부자들의 재물을 흠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로빈훤드 얘기”라며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것이니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경영진에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무슨 국가 정책이 ‘부자의 선의’에 호소하느냐”며 “정부 정책(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언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2017년 발족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모금액이 1164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73%인 853억 원은 공기업이 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유희양행**



모두의 건강도  
서로의 거리도

더 가까워질  
내일을 기대합니다



**베콤씨**<sup>®</sup>  
정  
Vitamin B+C, 도코타올, 셀레늄  
위험/신경통/눈의피로/기미·주근깨

**베콤씨**<sup>®</sup>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광고심의필:2020-1560-003205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윤석열〉

# “尹은 文정부 검찰총장... 정치 염두 뒀다고 생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분류되며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갈등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 정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관본

검찰개혁 협력해야 할 법무부-검찰간 갈등, 국민께 송구  
원전 감사·검수사 정치적 목적 없어... 불개입 원칙 지켜  
박원순 행동 안타까워... 與 재보선 공천, 당·당원 뜻 존중

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여러 관행 등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할 법무부

와 검찰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 국민께 정말 송구스러웠다”며 “지금부터라도 양측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이뤄진 감사”라며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

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조치’는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2개월 처분에 대해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사실과 2차 피해도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한편

으로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고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재보선 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어기고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가 만들었다고 당헌이 신성시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춘추관에서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로 100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석해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3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 흔들린 文의 원칙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왔던 원칙이나 시각과는 달라진 발언을 내놔 시선을 끌었다. 우리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며 고민을 토로하는가 하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만든 당헌에 대해 “불변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

부 배상 문제는 당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의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을 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제 보복까지 감수하고 강경 자세로 일관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위안부 배상 판결에 “솔직히 곤혹스러운 일”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 깨지자 “불변 아니다”  
“박원순 2차 피해 ‘주장되는’ 상황’ 논란 불씨

서울·부산 시장 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 해법을 꼬이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던 시점에 쏟아졌던 비판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

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여론의 비판을 받아 ‘피해자’로 정정했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정일환 기자 whan@

##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

“바이든 美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이어가야”... 협력사업 재개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한다거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

답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톱다운보다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총비서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의 합의된 것”이라면서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환 기자 whan@

## “MB·朴 사면, 말할 때 아냐... 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임기 내 사면 가능성 열어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 첫 질문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를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

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국민 공감대’를 제시해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데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의중도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신한의 또 다른 이름, 기발한 프로덕션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능성들과 함께해 온 신한

이제 스타트업, 청년, 소상공인들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새 이름을 붙입니다

‘기발한 프로덕션’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더 크게 키워낼 때까지  
신한인듯 신한아닌 신한같은,  
기발한 프로덕션은 계속 됩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시 신한벤처투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간선급행버스체계〉

# 3기 신도시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달린다

버스+철도시스템 장점 조합  
지하철 수준 속도·정시성 갖춰  
성남·창원·세종에도 구축키로  
부산·대전엔 BRT 신설·확충

전용차로와 신호 등으로 지하철처럼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Super Bus Rapid Transit)가 인천계양~부천대장·인천·성남·창원·세종에 구축된다. 또 부산과 대전에는 BRT(Bus Rapid

Transit)를 신설하거나 확충한다. 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징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한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S-BRT는 지하철 수준의 속도 및 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BRT를 말한다.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다. 1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세종시는 세종시 순환구간에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통해 2022년 S-BRT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북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경유지는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북정역사거리로 이 중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2.8km)를 우선

공사할 계획으로 올해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이 목표다. 인천계양~부천대장과 인천 S-BRT는 2026년 개통 목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인천시에는 인हा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 구축한다. 부산시와 대전시는 BRT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반석역~유성북합터미널까지 6.6km 구간에 BRT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나경원(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국민의힘 21일까지 후보 등록… 보선 본격 레이스

경선 전부터 치열한 기싸움  
“지나친 비난 경계” 목소리도

4월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당이 주목을 받아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지나친 공방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보궐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주요 인사는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해 김선동·나경원·오신환·이해훈·이종구 전 의원,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

대 교수, 김경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10명이다. 부산시장 출마를 앞둔 인사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연주·유재중·이진복·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등 6명이다. 전날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를 알리자 나경원 전 의원은 “도대체 왜, 어떻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오 전 시장을 향해 “1년짜리 관리형 시장에 만족하고 다음 지방선거엔 불출마하시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과 오 전 의원 사이의 힘겨루기도 이어졌다. 나 전 의원이 전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오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

은 필패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나 전 의원은 “시대에 따라 때로는 좌가 옳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가 옳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후보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해훈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권 승리가 주목표인데 상호 공격이나 비난이 도를 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접수를 통해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이후 22일부터 25일까지 서류를 심사하고 24일과 25일에 부산과 서울을 찾아 면접을 진행한 후 26일 예비경선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박준상 기자 jooonoon@

## 北, 경제 내각 대거 물갈이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부총리 6명 새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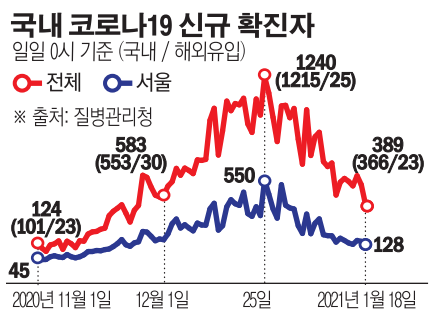
북한이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를 열고 경제 내각 진용을 대거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영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0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이 의제로 결정됐다. 특히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내각 구성원 상당수가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회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게 됐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

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 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전력 생산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목표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에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8차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당시 총리였던 김재룡과 리만간·김형준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김정호 인민보안상(현 사회안전상) 등 최소 5인 이상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신규 확진 300명대… “숨은 감염원 발굴 주력”

가족·동료 간 감염 증가세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2개월여 만에 4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음 달 설연휴를 계기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고 백신 보급으로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이날 중 확실히 추세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89명 증가한 7만27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366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 국내발생은 기존에 확산세가 지속했던 수도권·영남권에서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안산시 병원2(총 11명), 대구 달성군 사업장(총 10명)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된 것 외에 단일 감염경로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없었다. 기존 감염경로에선 확진자가 2~5명 느는 데 그쳤다. 최근 1주간(10~16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전주 41.1%에서 39.3%로 소폭 내렸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0.79까지 떨어



졌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완화한 방역조치를 적용해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을 허용하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틀까지 ‘숨은 감염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 “11월 이후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5.4%, 그중에 가족이나 직장 내 전파가 62.4%로 가족·지인·동료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식당·카페 매장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의 핵심 방역수칙 완화 결정 철회를 요청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철화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연말정산, 현금 결제한 안경·렌즈 영수증 제출해야

쟁겨야 할 의료비 7가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매비 등이 새로 추가됐지만, 현금으로 산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하지

만 현금으로 구매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정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

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므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의료비로 2020년에 100만 원을 지출했고,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월에 8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된다.이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나홀로 V자 반등한 中 코로나 재확산이 변수

허베이성 중심으로 봉쇄 잇달아  
美 무역전쟁 등 경기회복 복병

중국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 변수가 새해 경기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 증가한 101조6000억 위안(약 1경729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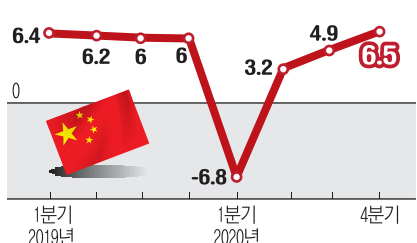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중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3분기(4.9%)보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과 분기 경제성장률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제시한 전문가 전망치는 4분기는 6.1%, 2020년 전체 성장률은 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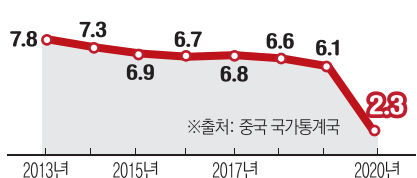
중국은 우한시에서 세계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인프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성장률은 2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 2분기와 3분기 각각 3.2%, 4.9%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는 6.5%로 뚜렷한 V자 곡선을 그렸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변수와 이동제한이 소비 등 경제 활동을 둔화

중국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중국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시킬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새해 경제회복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3.9% 감소해 중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으로 남았다.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 소비 지출도 4% 가까이 감소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쳤다.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2.1%에 그쳐 6%대였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올해에도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소비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과 지린성 등 북부 지방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당국이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에 이동을 자제할 것을 국민에 당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끝나지 않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긴축적 통화정책도 올해 경기회복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日 스가, 시정연설서 대놓고 ‘韓 홀대’

다자주의 역설하며 한국 맨 마지막에 언급… 강제징용 관계악화 반영된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1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처 등으로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스가의 연설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하고 그린과 디지털 등 주요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역설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평가다.

18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내각 기본 방침과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악화일로인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뒀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면서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처벌·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핵심인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2월 말 접종을 시작

할 계획이다.

최근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올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가 총리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준비를 추진하겠다”며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또 동일본대지진을 딛고 일본이 부흥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린’과 ‘디지털’을 제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놴다. 2조 엔(약 2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 차세대 태양광 발전 등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한다는 목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출범하는 디지털정이 강력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사령탑으로서 정부의 디지털화를 주도한다”고 밝혔다.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이후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도 추진한

다.

외교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다자주의를 중시한다고 표명했다.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이른 시일 내 만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근린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한국 순으로 언급했다.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밝히는 등 애써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통통신은 한국 법원의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지난 8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 따른 관계 악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남관표 주일본 한국 대사와 이임 면담도 하지 않아 ‘외교 결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 도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해결을 강조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그린’과 ‘디지털’ 등 키워드를 제시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 ‘버진오빗’ 항공기 통해 인공위성 발사

지상 발사보다 비용 저렴… 브랜슨 ‘우주개발 신기원’

버진그룹 계열의 인공위성 발사업체 버진 오빗(Virgin Orbit)이 인공위성 공중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새해 벽두부터 우주 사업을 둘러싸고 억만장자들의 대격돌이 시작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영국의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세운 버진오빗은 이날 위성 발사용 로켓 ‘론처원’의 공중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위성들이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됐으며, 우리는 모두 론처원의 첫 우주 임무 완수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버진오빗은 이날 캘리포니아 모하비 항공·우주 기지에서 항공기 발사 타입의 로켓 론처원을 개조된 보잉 747기인 ‘코스믹 갈’에 실어 이륙시켰다. 코스믹 갈은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쯤 태평양 상공에 도달했으며, 3만5000피트 상공에서 왼쪽 날개 밑에 탑재된 론처원을 계획한 대로 깨끗하게 분리했다. 론처원은 수초 뒤 엔진을 점화해 수직상승, 약 30분 동안 해안 궤도를 선회했다. 우주에 도달한 론처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소형위성 10개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버진오빗의 공중발사 방식은 지상에서 발사



보잉 747기인 ‘코스믹 갈’ 날개 아래 장착된 위성 발사용 로켓 ‘론처원’. 모하비/로이터연합뉴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식은 기존 발사보다 연료가 덜 드는 것은 물론, 발사장과 발사대가 필요 없다. 장소나 날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로켓 발사대가 아닌 기존 공항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발사 장소 선택의 폭이 크고 천동·번개가 몰아쳐도 고도를 높여 발사하면 된다.

한편 버진오빗의 이번 성과로 우주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창업한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설립한 블루오리진, 그리고 브랜슨 회장의 버진갤릭틱 등 3대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관광과 로켓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중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납품 허가를 취소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더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인텔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들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를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4개 기업에서 최소 8개 수출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인텔과 키옥시아(구 도시바메모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 트럼프, 화웨이에 ‘마지막 공격’ 인텔 등 반도체社 수출면허 취소

지난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요청 대부분을 거부하고 이미 발행된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취소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화웨이를 제재해왔다. 캐나다는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런칭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딸 명완저우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19년 5월부터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그 자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제품과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반도체 산업의 광범위한 제품이 걸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 결정 전에도 이미 약 150개의 라이선스가 중단돼 1200억 달러(약 132조 원)여치의 상품과 기술에 대한 판매가 금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며칠 남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가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상무부로부터 허가 거부 의사를 통보받은 업체는 20일 내로 상무부에 의견을 내면, 상무부가 다시 45일 안에 변동사항 등을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상무부의 최종 결정이 나와도 해당 업체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간(45일)이 남게 된다. 여기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가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를 이어갈지도 불확실하다.

로이터는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를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텔과 키옥시아 측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애매모호한 업종 기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혼란

## 금융위, 코로나 특별 지원 프로그램 논란

# “사실상 강제로 영업을 금지하고서는 지원금은 집합제한업종보다 적은 일반업종으로 취급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장 문을 닫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내 체육 시설이라 한 달 넘게 축구 교실을 열지 않은 A씨는 자신의 업장이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A씨는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축구 교실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일반 업종”이라는 답을 들었다.

소상공인들은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A씨의 사례처럼 사업장이 집합제한업종 또는 일반업종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분명한 기준, 두번 우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

##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다르지만 사업장 구별 ‘가이드라인’ 모호

## 일반업종은 추가대출 지원 제외 업계 “다 힘든데 업종 왜 나누냐”

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연습장이며 2.5+  $\alpha$  단계에서는 여기에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된다.

###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         |                                           |
|---------|-------------------------------------------|
| 지원대상    | 전체 소상공인                                   |
| 달라지는 내용 | 금리(2~4% → 2~3%), 보증료(1년차는 0.9% → 0.3%) 인하 |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

|         |                     |
|---------|---------------------|
| 지원대상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
| 달라지는 내용 | 최대 1000만 원 대출 추가 가능 |

※ 출처: 금융위원회

이처럼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인지, 집합제한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뒀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도 그랬다. 당시 새희망자금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50만 원,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A씨 사례처럼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 내지는 제한업종으로 포함되지 않아 일반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힘들었음에도 일반업종에 해당돼 더 적은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B씨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라더라”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 이의 신청을 하자 2달이 지나서야 제출 서류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아우르지 못하는 현실적 기준에 자금이 당장 급한데 지원금을 늦게 받거나, 덜 받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 힘든데, 일반업종은 대출 지원 제외= 금융위원회의 이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집합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일반업종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금리·보증료 인하 등)은 적용되지만 1000만 원 추가 대출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선 빠진 것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C씨는 “일주일 동안

1만8000원짜리 티 1장 팔았다. 사람들이 집박을 안 나오는데 업종을 왜 나누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D씨도 “업무 특성상 배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반 소상공인도 똑같이 매장 월세 내고 관리비를 내야 해 힘들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돼 소비자들이 집에만 머물러 일반업종도 집합제한업종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89.8로 11월보다 8.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9월(79.4)부터 10월(91.6), 11월(97.9)을 거치며 상승하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떨어진 수치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업종이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지원하는 범위를 좁힐 필요가 없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우리금융 “착한 소상공인을 찾습니다”

### ‘우리동네 선한가게’ 모집

우리금융은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한 활동을 나누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우리동네 선(선)한가게’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나눔, 기부, 봉사활동 등 선한 영향력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총 100개 업체를 선발해 오는 3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생활자금 △가게 홍보 이미지 광고 제작 및 우리은행 영업점과 WON(원)뱅킹 앱(App)을 통한 홍보 △우리카드 오픈마켓 ‘위비마켓’ 입점을 통한 상품판매 등이며, 우리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우리동네 선한 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모집 참가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영업점이 추천한 영업점 인근 선한 소상공



우리금융그룹은 ‘우리동네 선(선)한가게’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인들과 함께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최종 선 받된다.

손태승 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더불어 그룹 ESG전략 방향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비급여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할증

### 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 7월 ‘4세대 실손보험’ 도입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부터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사람의 보험료는 비싸지고,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실액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이 출시된 뒤 3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7월 ‘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앞서 후속조치로 관련 보험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실손보험은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돼 운영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기에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보험가입자도 보험료 인상 요인의 근거를 특정하기 힘들었다.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된다”며 “향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약관)은 재가입 주기가 15년마다 변경 가능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행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손보험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심각하고, 가입자 간 의료이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 보험료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과잉 의료서비스를 막고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급여는 기존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자기부담률이 상승한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1만 원(상급·중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친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박진산 기자 jinsan@

## ‘최대 3년치 임금 + $\alpha$ ’ 희망퇴직 뱅커 1700명

### 자녀 학자금·의료비 등 지급 후한 조건에 신청자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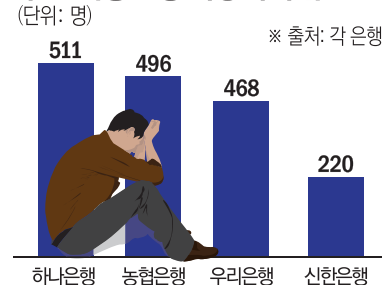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희망퇴직을 확정된 은행권에서 1700여 명의 은행원이 이미 떠났거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KB국민은행까지 확정되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는 인력은 2000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이 최대 3년치 임금을 학자금, 전직지원금 등 후한 조건을 제시하자, 희망퇴직을 선택한 이들이 예년보다 늘었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은 희망퇴직으로 이미 떠났거나 이달 안에 떠날 인원은 약 1700명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던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각각 511명, 496명이 직장 문을 나섰다.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285명이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에게는 36개월치 평균임금(관리자금은 27~33개월치)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 원),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이 지급됐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으로 24개월 또는 27개월 평균임금을 줬던 전년보다 조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특별퇴직 인원도 전년 92명에 비해 5배 넘게 늘었다. 하나은행에서는 1965년생과 1966년생 일반 직원 226명도 특별퇴직했다. 이들은 각각 25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을 받았다.

농협은행도 이번에 특별퇴직 보상과 신청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 신청자가 전년 356명보다 140명 넘게 늘었다. 농협은행은 만 56세는 28개월치, 만 54~55세는 각각 37개월, 35개월치를 지급하

### 주요 시중은행 희망퇴직 규모



고 3급 이상 직원 중 1967~1970년생은 39개월치, 1971~1980년생은 20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줬다. 여기에 전직 지원금도 추가 지급됐다. 전년도에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에게 20개월치를 일괄 지급했던 것보다 보상이 크게 늘었다.

우리은행은 1월 말 468명이 희망퇴직을 한다. 조건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일반 직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희망퇴직하는 인원이 전년 326명보다 140여명 늘었다. 우리은행은 이번엔 만 5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1965년생에 24개월치,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800만 원),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여행상품권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20여 명이 손을 들어 지난해 250명보다는 규모가 약간 줄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1962년 이후 출생자로,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작년과 조건이 같은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조건을 둘러싸고 노사 입장이 맞서면서, 아직 희망퇴직 공고를 띄우지 못했다. 희망퇴직 접수 지연으로 지점장 인사도 미뤄졌다.

서지연 기자 sjy@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2020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할 때마다 ‘배터리 이상 징후’ 찾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판매는 30만 대를 훌쩍 넘어섰다. 전기차 판매는 2011년 236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현대·기아차만 10만1238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충전 중인 수십만 대의 전기차에서 배터리 데이터를 확보하면 화재 징후 파악을 넘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빅데이터 수집해 사고 예방부터 원인 파악 재활용·재사용 적합 배터리 미리 골라내 관리 가능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성 예측 가능 =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특정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해당 전기차의 과거 모든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다.

배터리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 온도와 충전량, 주행 환경과 정비 여부 등을 파악한다. 관련 데이터가 쌓일수록 예측 정확도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상 운행 중인 전기차에서 비슷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과충전 방지 △예방 점검 지시 △운전자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치는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이른바 OTA(On the Air) 방식을 활용한다. 예컨대 화재 징후가 포착된 전기차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예방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다. 여기에는 ‘과충전 차단’ 소프트웨어와 함께 예방 점검 권유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배터리 결함 때 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때 ‘배터리팩’ 전체의 충전량 SOC(State of Charge)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이 ‘팩’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작은 모듈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자연스레 비용도 절약된다. 현재는 배터

### 배터리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   |                        |
|---|------------------------|
| 1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징후 예측       |
| 2 | 배터리 결함 발생 시 명확한 원인 파악  |
| 3 | 전기차 배터리 실차 성능정보 파악     |
| 4 | 제조사별 배터리 성능수준 모니터링     |
| 5 | 폐배터리 재활용(리튬 추출) 또는 재사용 |
| 6 | 사회간접자본(정부 지원 배터리) 디지털화 |

리가 문제 될 경우 고가의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한다. 이와 달리 빅데이터가 쌓이면 내용물 가운데 문제가 된 특정(결함) 모듈을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수리 비용 측면에서 한결 유리하다.

완성차 제조사는 물론 배터리 제조사 역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경쟁사의 기술 및 성능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사의 기술발전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국가 기술력을 끌어내는 데 적잖은 효과도 기대된다.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순환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전기차 효과는 약 5년 뒤 ‘폐배터리 문제’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순환’을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화재 징후’를 포착하면 과충전 방지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 사진은 2019년 주차장에서 자체 발화 중인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인사이드EV 트위터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 △재활용 △재사용 등으로 재순환된다. 먼저 재활용은 전기차에서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폐배터리를 뽑아내고, 여기에서 리튬을 포함한 희귀금속을 추출한다. 리튬 등은 다른 배터리 제작에 쓰인다.

반면 재사용은 이름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 팩을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한 폐배터리에도 70~80%의 정상 모듈이 존재한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에너지 저장장치, 이른바 ESS에 활용할 수 있다.

배터리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재활용과 재사용에 적합한 배터리를 사전에 골라낼 수도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애초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연기관의 경우 불량 연료를 주유하게 되면 엔진 고장은 물론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가 법으로 품질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수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관계 당국 차원에서 배터리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SK하이닉스, 소비자용 SSD 국내 첫 출시

### 美서 호평받은 Gold P31·S31 최대 1TB…128단 낸드 탑재



의 순차 읽기와 3200MB의 순차 쓰기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전력 효율성도 동종

타제품 대비 236% 높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8단 낸드플래시와 독자적인 ‘하이퍼 라이트(HYPER WRITE)’ 기술이 탑재된 점도 특징이다. 용량은 1TB(테라바이트)와 500GB(기가바이트) 두 가지다.

이날 함께 출시된 SATA 인터페이스 방식의 Gold S31은 범용 제품으로 1TB, 500GB, 250GB 세 가지 용량으로 판

매한다. 초당 560MB의 순차 읽기, 525MB의 순차 쓰기가 가능하며 온라인 학습, 화상 회의 등에 적합하다.

회사 측은 두 제품 모두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리뷰 평점을 기록했고, 해외 기술 전문 매체가 주관하는 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능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소비자용 SSD를 국내에 출시함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저장 용량을 업계 최대인 8TB까지 늘린 ‘870 QVO 시리즈’, 4세대 PCIe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980 PRO’를 연달아 출시한 바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현대위아, 국내 최초 ‘전기차 열관리 모듈’

### 배터리 적정온도 유지 성능 향상

현대위아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인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적용될 이 모듈은 2023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모듈은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구동장치, 전장 부품의 열을 관리하는 장치다.

친환경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 폐열 회수와 활용을 넘어서는 별도의 열관리 장치가

필수적이다. 차량 내부 구동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각 부품의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현대위아는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이 구동·전장 부품과 배터리까지 아우르며 열을 관리하도록 개발했다. 현대위아는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해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 냉각 모듈에 실 내 공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까지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반려동물이나 소중한 물건에 부착해 분실 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이다. 사진 왼쪽부터 자동차·반려견·여행가방에 부착한 갤럭시 스마트태그.



## “소중하면 ‘갤럭시 스마트태그’ 하세요”

### 동물·가방 등 부착, 위치 찾아줘 배터리 최장 300일…2만9700원

삼성전자가 쉽고 편리한 위치 관리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태그(Galaxy SmartTag)’를 18일 출시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갤럭시 기기 외에 반려동물이나 열쇠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들에 부착해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 내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에 기기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한 대당 여러 개 등록도 가능하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에 표시해주는데,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주변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도움으로 사용자가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하네스(안전띠)에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부착해두면 산책 중 줄을 놓쳐 반려견과 멀어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을 땐 신호음을 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갤럭시 스마트태그’의 버튼을 2번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리게도 할 수 있다.

소형 크기의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상단에 구멍이 있어 열쇠고리나 가방에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또한, CR2032 규격의 교체 가능한 코인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3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스마트폰과 정보를 주고받는 강력한 보안 기능도 탑재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검은색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2만9700원이다. 19일부터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를 비롯해 삼성 전자 홈페이지,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오프라인 색상 모델과 ‘갤럭시 스마트태그’ 2종 혹은 4종 패키지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현대차 ‘2021 넥쏘’ 출시 125만원 내려 3265만원 〈보조금 지급시〉



18일 현대차는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한 수소전기차 ‘2021 넥쏘(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안전·편의장비를 보강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이전보다 약 100만 원 낮췄다.

2021 넥쏘는 △10.25인치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OTA·Over the Air) △물 배출 기능 △레인 센서 △앞 좌석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드 등의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갖춘 게 특징. 나이가 음성인식 기능도 개선했다.

2021 넥쏘의 판매 가격은 △모던 6765만 원 △프리미엄 7095만 원이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보조금이 3500만 원(국비 2250만 원, 지자체 125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고객 구매가격은 125만 원씩 내린 △모던 3265만 원 △프리미엄 3595만 원으로 넥쏘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美 특허심판 기각’ 놓고 LG·SK “의미 있다” 해석 제각각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무효심판(IPR)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심판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일 뿐 본질 쟁점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 청구한 것을 기각하기로 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PTAB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미 특허심판원이 조사개시를 기각하면서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언급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사진제공 각 사

## LG “다툼 시작부터 막혀”…SK “특허 무효 가능성 열려”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내달 11일 최종판결

한 점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효력 상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특허심판원이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이는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517 특허’에 대응하는 한국의 ‘310 특허’가 2011년 한국에서 진

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이 SK 측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미 특허심판원의 LG 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특허무효심판이 각하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곧바로 LG에너지솔루션은 “대응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거론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해 “(SK가) 미 특허심판원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술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라면서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

쟁점을 주장했는가’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이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며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의) 중복 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계속되는 장외전으로 높아진 피로도에 양사 모두 투명하게 내용을 공유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사 소송전의 핵심인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내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한국지엠, 트랙스 1.4가솔린 터보 상품성 개선

한국지엠은 상품성을 개선한 쉐보레 트랙스 SGE 1.4 가솔린 터보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모델은 직분사 방식을 바탕으로 최고출력 155마력을 내면서도 친환경저공해자 3중 인증을 획득했다. 가격은 △LS 디럭스 1885만 원 △LT 2091만 원 △LT 코어 2170만 원 △프리미어 2298만 원 △레드라인 LT 코어 2205만 원 △레드라인 프리미어 2330만 원이다.

사진제공 한국지엠

## CJ대한통운, 대구·경산 택배기사 건강상담

###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MOU

CJ대한통운은 대구 및 경산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검진 결과 연계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3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과 대구·경산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의 전문의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다.

협약 체결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결과 기반 전문의 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도 연간 3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강상담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건강정보 제공부터 전문적 질병 지식 및 행동수정을 위한 교육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택배기사에게는 개인의 신

체적, 환경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제시된다.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기사 편의성을 고려해 근로자건강센터 전문의료진이 서브터미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건강검진 등에 드는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과 경산에 있는 20개 서브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156명을 대상으로 사범서비스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CJ대한통운은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센터로 협약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내실화 해 나갈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설비 도입, 건강검진 전액 지원, 물량축소요청제 도입, 적정배수량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이라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1월 10일 현재 목표 4000명 대비 77% 수준인 3078명의 인수지원인력을 투입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및 경조사 휴무비용 지원 등 업계 최고수준의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 OMAR SHARIF

## PARIS

### 고객과 함께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오마샤리프화장품(주)

고기능성 스킨케어 전문 제조 기업,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자연에서 얻은 성분에 차별화된 기술을 담아 주름, 미백, 트러블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찾은 실크프로테인과 꿀벌에서 얻은 발암억제 비옥, 돈태반과 누에싹 등 오마샤리프화장품만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MP와 화장품 국제인증 ISO-22716을 획득,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최적의 생산 환경에서 최상의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합니다.

●사업분야 : 화장품원료 및 생산 연구개발 / 의·약외품 개발 및 생산 / 화장품 브랜드 개발 / 화장품 OEM, ODM 생산  
●주요 생산 제품 : Re20 / Re20링클 / Re20음모 / 이디엄음모 / 랑스크림 / OS실크 / 태비안 / 콜라겐제품 등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연암읍금로 237-29 ●대표번호 : 041-912-0920 ●소비자상담번호 : 080-020-2500 ●홈페이지 : www.omarsharif-cosmetic.co.kr

# LG U<sup>+</sup>, 2G 종료 선언… 이용자들 “예전번호 포기 못해”

6월 말 완전 종료 목표… 지난해 11월 기준 37만명 이용  
5G·LTE 전환하면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통신비 할인  
시민모임 “이용자 보호조치 미흡… 법정 다툼 이어갈 것”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지난해 2G를 종료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법호 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2G 사업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게 목표다. LG유플러스는 2G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문자 안내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나는 등 새로운 일정이 생기는 시점에 추가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의 2G 이용자는 37만4000여 명이다. 지난해 7월 2G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 SKT의 이용자도 14만3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14만3000여 명은 실질적으로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3G나 LTE 등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들이다. 정부가 2년간 보상 조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계에는 포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면서 이용자 보호조치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SKT는 잔존 가입자 38만4000명의 2G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놔다. 3G 등으로 전환하는 2G 가입자는 △단말기 구매금으로 30만 원을 지원받고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 원씩 할인받거나 △24개월간 이용 요금의 70%씩 할인해주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도 SKT의 선례를 참고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TE나 5G로 전환하는 고객은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0만 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 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 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2G망을 쓰는 알뜰폰 사용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무약정 단말기 12종(갤럭시A21s, LG폴더2, X4 2019, 갤럭시A10e, 갤럭시폴더2 32GB, 갤럭시J3 2017, 갤럭시J4+, 카카오톡프렌즈폰3, LG 폴더폰, LG Q3, 카카오톡프렌즈폰2, 갤럭시폴더2)이 LTE 전용 제품인 만큼, LTE로 전환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또, 3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회원들은 정부

와 통신사들의 2G 종료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3만 9000여 명의 회원을 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네이버 카페의 관리자는 16일 게시한 공지글에서 “LG유플러스의 2G 종료는 010 통합정책 시행을 위한 과기정통기부와 통신사의 부당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은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3년 헌법재판소는 01X 전화번호 이용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SKT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SKT에 따르면 아직 판결 선고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LG유플러스의 지원 프로그램이 SKT 때보다 확대된 것 하지만, 01X 번호를 버려야 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SKT에서 2G를 쓰다가 지난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꾼 011 이용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무약정 단말기 모두 구형이며, 요금 혜택도 공시지원금 등과 중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차라리 알뜰폰 요금제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T의 지원 수준을 참고한 것이고 당시보다 혜택이 확대된 것”이라며 “무약정 단말기 12종은 향후 변동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 LG유플러스의 2G 이용자 중 010 이용자가 70% 정도이며 번호를 버려야 하는 01X 이용자는 30%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SK텔레콤 ‘V컬러링’ 서비스 화면.

사진제공 SK텔레콤

## SKT 보이는 ‘V컬러링’ KT고객도 쓴다

양사 공동서비스 업무협약… LG유플러스와도 연동 계획

KT 이동전화 가입 고객들도 SK텔레콤(SKT)의 영상 통화연결음 서비스 ‘V컬러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가 인증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개발한 적은 있지만, SKT의 서비스를 KT가 연동해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T와 KT는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T T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V컬러링 공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V컬러링은 고객이 미리 설정한 영상을 본인(수신자)에게 전화한 상대방(발신자) 휴대전화에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보여주는 ‘영상 컬러링’ 서비스다. 지난해 9월 24일부터 SKT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3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15만 명, 누적 뷰 1억 4000만 건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달 22일부터는 기존 SKT 고객뿐만 아니라 KT 고객들도 ‘V컬러링’ 전용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 갤럭시 노트20-울트라(OEM 단말) 사용자들부터 단말 업데이트

로 발신 시 V컬러링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는 새롭게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S21-플러스-울트라(OEM 단말) 사용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고, 차츰 대상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다. KT 고객의 서비스 가입은 ‘V컬러링’ 앱과 ‘마이케이티’ 앱, 온라인 ‘케이티닷컴’과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SKT의 V컬러링에서는 미스터트롯 Top6, 몬스타엑스와 같은 인기 연예인 및 팬수 등 인기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새해 시즌영상과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향후 집콕 트렌드를 반영해 콘텐츠, 레전드 인기 예능 영상, 스튜디오 톨루랄라의 ‘워크맨’ 영상 등 이용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SKT는 추후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기업 간 거래(B2B) 및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 ‘넷플릭스법’ 대상자에 네이버·카카오 등 6곳 지정

과기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자 지정…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           |       |
|-------------------------------|-----------|-------|
| (단위: 명, 2020년 10~12월 일평균 수치)  |           |       |
| 구분                            | 이용자 수     | 트래픽 양 |
| Google LLC                    | 8226만7826 | 25.9% |
|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유)                 | 174만2947  | 4.8%  |
| Facebook Inc.                 | 1432만4164 | 3.2%  |
| 네이버(주)                        | 5701만4619 | 1.8%  |
| (주)카카오                        | 5521만2587 | 1.4%  |
| 콘텐츠웨이브(주)                     | 102만5729  | 1.18% |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야 한다. 또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야놀자, 산하정보기술 인수… ‘호텔 솔루션’ 서비스 강화

엔택트 솔루션 고도화

야놀자가 호텔 솔루션 기업 산하정보기술을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하정보기술은 호텔·리조트·골프장·레스토랑 등 여가 시설 분야 IT 솔루션을 개발,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더케이호텔, 롯데리조트 등 국내 주요 호텔·리조트 및 베스트웨스턴 호텔그룹, 윈덤 호텔그룹 등 글로벌 호텔 브랜드 1000여 곳의 주요 고객사에 서비스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호텔 수익을 극대화에 기여하고, 일본 등 아시아 시장

에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PMS)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해외 진출도 가속하는 중이다.

야놀자는 산하정보기술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가 자사의 기술력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2019년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엔택트 호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두 회사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호텔 및 리조트 등 다양한 여가 시설로 엔택트 솔루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1위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야놀자가 자체 개발한 종합 호텔 자동화 솔루션 와이플럭스(Y FLUX)에 대한 산하정보기술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산하정보기술이 호텔을 비롯해 리조트, 골프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와이플럭스의 적용 범위를 넓혀 업계의 디지털 전환 및 엔택트 솔루션 확장을 가속할 예정이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통합 솔루션 고도화로 전 세계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디지털 기술 혁신도 주도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 배민, 올해 첫 ‘자상한 기업’ 선정

‘소상공인 펀드’ 50억 출연…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 구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021년 첫 번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아한형제들과 ‘상생협력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아한형제들을 26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석했다.

프로토콜 경제는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규칙을 만들어 참여하는 개방형 경제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과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자상한기업은 중기부가 2019년 5월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프로토콜 경제 이념에 부합하는 첫 번째 상생 모델로 해당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50억 원을 출연, 500억 원 규모의 자

금을 조성해 10년 이상 영업을 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내 가게 점포 구입’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협·단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도 구성해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플랫폼 데이터도 공공과 민간에 공유한다. 보유한 지역·업종별 거래 데이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개별 업주에게 맞춤형 마케팅 분석정보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플랫폼 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적극 공유, 활용해 프로토콜 경제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교육 지원기관 ‘배민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한 선결제 기능도 배민 플랫폼 내에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 “장보기 겁나네” 주부, 뛰는 식탁물가에 긴 한숨

# 이경아(45) 씨는 요즘 온라인 가게부쓰기가 무섭다. 이 씨는 자녀 둘을 둔 맞벌이 부부다. 부부 모두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장보는 비용도 덩달아 늘었다. 최근 신선식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씨가 일주일~열흘치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쓰는 비용은 최근 한달새 10% 이상 올라 가게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집밥이 늘면서 장바구니 물가로 고민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잦아지며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지 수개월째인 데다 최근 들어 한파와 AI(조류인플루엔자)로 신선식품과 계란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저장성이 높아 미리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미리 구매하기 부담스럽다.

18일 농산물유통정보와 소비자원 참가격 등 물가정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장바구니 물가가 한달새 11.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나해 12월 셋째주 4인 가족의 일주일치 장보기 비용은 15만 6245원이었지만 1월 셋째주에는 17만 4334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쌀 등 곡류와 라면이나 장류, 생수 등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식품의 가격 인상률만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가공식품

4인 기준 한 달 새 11.58%↑  
한파 영향에 채소류 가격 폭등  
명절 제수용품·과일도 뒤따라  
밀키트 등 ‘도미노 인상’ 우려

구입 비용까지 더할 경우 일주일치 장보기 비용은 20만원대 중반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채소류의 가격 인상폭은 확연히 두드러졌다. 1월 들어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채소 출하량이 줄어든 탓이다.

쪽파는 500g 기준 1월 셋째주 가격이 6460원으로 전월 동기대비 86.98% 올라 집에서 파전을 준비하려면 식재료 비용만 밀가루와 각종 해산물을 더할 경우 1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된장찌개 역시 애호박, 양파 가격이 같은 기간 각각 37.05%, 18.44% 오르며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슷한 비용이 소요된다.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기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삼겹살 1kg의 가격은 2만 9360원으로 3만원선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상추는 물론 풋고추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수입 삼겹살 집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 더 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품목별로는 육류는 인상이 미미했지만 채소류 인상폭이 컸고 수산물도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강보합세를 보였다. AI 우려로 이미 12월부터 오름세를 보

여온 계란은 한달 새 인상폭은 적었지만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가격이 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채소류는 양배추가 한 통 기준 4600원

대로 35.95% 오르면서 쪽파와 애호박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을 기록했다. 상추가격도 22.59% 올랐고 대파 1단은 12.27% 오르면서 40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설 제수 대표과일인 사과와 배 가격도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아직 제수용품을 준비하기에 이른 시기인데도 벌써부터 10% 내외의 인상을 보 이면서 올 설 선물세트에서 사과·배 세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뿔 조짐이다. 사과 대신 제철 딸기를 구매해도 한팩에 8000원 내외로 4인 가족이 한번에 먹을 분량을 준비하려면 2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갈치가 마리당 35.89% 오른 8414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 다.

이같은 장바구니 물가 행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신선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하나둘씩 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 역시 도미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장 판매가격이 오르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산지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나 협력업체와 추가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유한양행 ‘렉라자’ 31번째 국내 신약 허가

(비소세포암 치료제)

임상·자문 거쳐 올해 최종 허가  
“전 세계 폐암환자의 희망 될 것”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사진)’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진행성 폐암 환자 중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제품을 국내에서 실시한 2상 임상시험(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신청했다. 식약처는 신형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약사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

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폐암을 치료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렉라자정’의 허가 완결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했다.

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인 암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된 폐암의 5년 생존율은 8.9%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 2021년 폐암 환자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된다. 폐암 중 비소세포폐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30~40%가 EGFR 변이 양성으로 진단된다.

이런 환자에게는 1~2세대 표적치료제를 사용하지만 이 가운데 약 50~60%의 환자가 T790M 돌연변이에 의한 내성을 갖게 되어 치료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한양행의 혁신신약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T790M 돌연변이 내성에 강한 3세대 표적치료제다. 특히, 뇌혈관장벽(Blood-Brain-Barrier, BBB)을 통과할 수 있어 뇌전이 발생한 폐암환자에게도 우수한 효능 및 뛰어난 내약성을 보였다.

이번 허가로 1, 2세대 EGFR 표적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2015년 전임상 직전 단계에서 도입해 물질 최적화와 공정 개발, 전임상과 임상을 통해 2021년 국내 허가를 받게 됐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렉라자는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인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된 유효성 및 안전성을 인정 받은 치료제로서 이번 허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며 “이번 허가가 EGFR T

790M 돌연변이 양성인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 허가에 배경이 된 임상 논문의 제 1저자이다.

또 조병철 연세대학교병원 폐암센터장 교수는 “렉라자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항종양 효과 및 안전성을 통해 우리나라 폐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될 것이며 글로벌 임상을 통해 전 세계 폐암환자의 희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렉라자의 허가임상을 주도하고 다국가 임상3상 1차 치료제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렉라자는 유한양행의 신약개발 역량과 국내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혁신신약이다. 이번 허가로 국내에서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SSG닷컴 ‘알비백’ vs 롯데쇼핑 ‘안녕, 또 보냉’ 친환경 보냉백으로 고객 사로잡는다

SSG닷컴의 ‘알비백’에 대해 롯데쇼핑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보냉백으로 맞불을 놓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슈퍼 프레스는 지난달 21일부터 ‘되근길 1시간 내 배송’ 서비스 테스트에 나섰다.

롯데슈퍼에 일정 상품을 오후 4~8시 사이에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동대문구, 성동구에 위치한 8개 점포에서 운영하며 배송은 전문 배달 스타트업이 맡았다.

롯데쇼핑은 롯데슈퍼의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재활용 보냉백 ‘안녕, 또 보냉’도 함께 테스트하고 있다. 이 보냉백은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SSG닷컴이 새벽배송에 활용하고 있는 ‘알비

백’과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

신선식품을 보냉 가방에 담아 고객에게 배달한 후 다음 주문 시 다시 수거해가는 형식이다.

롯데쇼핑은 우선 롯데슈퍼에서 사업성이 확인되면 롯데마트의 새벽배송에도 보냉 가방을 활용할 방침이다.

재활용 보냉백은 환경 보호와 함께 재주문시 수거방식을 통해 주문량을 늘릴 수 있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이마트가 운영하는 SSG닷컴은 보냉백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9년 6월 새벽배송을 시작하며 반영구적 재사용이 가능한 보냉가방 ‘알비백’ 10만 개를 자체 제작한 SSG닷컴은 배송할 때마다 고객이 다시 사용해준다는 의미로 영어 표현 ‘I’ll be back’ (다시 돌아온

다)을 차용했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냉가방을 제공해 스티로폼 박스, 아이스팩 등 일회용 포장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도는 SSG닷컴이 처음이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고객 반응은 폭발적이다.

특히 알비백 론칭 1년 동안 일회용 포장용품 약 1080만 개를 절감하는 효과도 냈다.

이를 무게로 바꾸면 7290톤, 일렬로 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2565km)에 달한다. 집객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활용 보냉백은 타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한정판 출시가 가능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다. 알비백의 경우 하겐다즈와 키티버니포니(KBP) 등 유명 브랜드와의 한정판 에디션이 나올 때마다 고객 호응이 높다.

남주현 기자 jooh@



“SNS로 신년 운세 확인하세요”

다섯 장의 카드 뒷면 이미지 중 한 장을 선택하면 동영상 통해 여행 운세와 행운의 컬러-아이템을 소개해주는 형식이다. 또한 이벤트 계정 내 게시물에 여행을 함께 가고싶은 지인 계정을 태그하고 댓글을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SE(1명), 갤럭시 버즈 플러스(2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8일부터 31일까지 신년 맞이 SNS 이벤트 ‘인스 타로 상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스타그램 이벤트 계정 화면에서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상승 조정기에 투자의 정석 ‘4분기 실적 호전주’

주요 증권사 “어닝시즌 맞아 ‘반도체·엔택트·전기차’ 등 주목”  
2차전지 관련 기업 동반 이익 개선 전망… 일부 흑자 전환 기대  
여행·항공 등은 적자… “단기적 시장 불안심리 자극할 수 있어”

‘4분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자.’ 현재와 같은 상승조정기에는 무엇보다 4분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증권사마다 서로 예상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증권사들이 꼽은 ‘실적 호전 예상 종목’을 살펴보면 추세를 읽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증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관심의 포인트는 국내 증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엔택트·전기차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 여부라고 할 수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3위자리를 지키고 있는 LG화학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17.9% 증가한 9984억 원으로 추산된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여수 NCC 사고, 환율 하락으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면서도 “전자사업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G화학을 포함한 2차전지 관련 기업의 동반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 삼성SDI의 예상 영업이익은 2371.4% 증가한 3294억 원, 에코프로비엠은 1019.9% 늘어난 183억 원, 일진머티리얼즈는 822.6% 성장한 184억 원 등으로 접쳐졌다.

LG상사(2371.4%), 금호석유(1182.7%), 유니테스트(622.2%), S-Oil(609.2%), 와이지엔터테인먼트(598.0%) 등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증가가 기대된다.

흑자전환 기업도 주목된다. LG디스플레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위 기업**  
※ IFRS 연결기준, 컨센서스는 추정치관수 3곳 이상 ※출처: 에프앤가이드

| 종목명       | 2020년 4분기 추정치(원) |       |       | 전년동기(%) |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 씨젠        | 3740억            | 2410억 | 1959억 | 1007.4  | 4599.9 | 3357.3 |
| LG화학      | 8조5033억          | 7784억 | 4747억 | 2.1     | 4017.9 | 흑전     |
| LG상사      | 2조7883억          | 409억  | 296억  | 6.7     | 2371.4 | 흑전     |
| 삼성SDI     | 3조5682억          | 3294억 | 3811억 | 26.5    | 1536.9 | 흑전     |
| 금호석유      | 1조2720억          | 2275억 | 1902억 | 6.2     | 1182.7 | 962    |
| 에코프로비엠    | 2682억            | 183억  | 124억  | 82      | 1019.9 | 1076   |
| 일진머티리얼즈   | 1673억            | 184억  | 124억  | 31.9    | 822.6  | -      |
| 유니테스트     | 724억             | 165억  | 136억  | 66.2    | 662.2  | 7876.5 |
| S-Oil     | 4조1722억          | 673억  | 887억  | -35.6   | 609.2  | 86.1   |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817억             | 80억   | 46억   | 28.7    | 598    | 흑전     |

레이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908억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OLED 사업 다각화, LCD TV 패널 가격 강세 등이 예상돼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 스튜디오드래곤, 한화솔루션, 현대제철, 한국전력, 대한항공, 롯데칠

성 등도 흑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추정치를 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59개사 중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씨젠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99.9% 증가한 2410억 원이 예상됐다.

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항공업종은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4분기 영업손실 703억 원을 기록해 적자 폭을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티웨이항공 역시 적자 확대에 기울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을 잃은 카지노 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강원랜드의 4분기 영업손실은 480억 원, GK는 312억 원을 기록해 적자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적 계산이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백신, 치료제 개발 소식, 접종 뉴스 등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김지윤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2021년 실적 기대치 상향에 조정을 맞추고 있으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에너지, 소재, 산업재, IT 업종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인아 기자 lijh@

## 금리반등에 베팅… 은행주 끌어모으는 外人

美 ‘블루웨이브’ 현실화 이후  
2주 동안 6400억 원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 사랑’이 유별나다. 은행주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데다 금리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주를 사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주(4~15일) 8개 상장 금융주와 시중은행 주식 3213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2492억 원어치의 코스피 상장 주식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주 기관과 개인은 은행주를 각각 2177억 원, 967억 원 어치를 팔았다.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씩쓸

이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서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반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블루웨이브에 따른 추가 재정 부양 확대와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1차 저항선인 1%를 뛰어넘어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NIM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은행 NIM은 전분기 대비 2b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분기부터는 시중금리 상승 모멘텀으로 은행 NIM이 상승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블루웨이브가 가시화된 연초 이후 2주 동안 외국인 은행주를 거의 6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리모멘텀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밖에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과 집단지출 금리도 상당폭 상승하고 있어 1분기에는 대부분의 은행들 NIM이 상승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주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던 배당금 축소 이슈도 이달 말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배당성향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려보다 배당 축소 규모가 크지 않고, 코로나 펜데믹이 올해 크게 가라앉으면 배당성향 정상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전년도 실적이 발표되는 1월 후반에는 배당실망감이라는 악재가 기반영되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호재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주의 주가 반등을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매일 300억 반대매매 ‘빃투의 그늘’

코로나 폭락장 때보다 규모 커… 위탁매매 미수금도 2배 폭등

증권사들의 반대매매가 급증하면서 개미들의 ‘강통 계좌’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빃투’(빃내서 투자) 현상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가 외상으로 사들인 주식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31억 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규모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 1월 전체 거래일인 10일 평균 167억 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앞서 4일 196억 원의 반대매매가 발생한 후 8일에는 235억 원, 15일에는 387억 원을 기록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락장 당시 발생한 반대매매 규모 보다 더 크다. 앞서 3월 19일 코스피지수는 최저 1439.43까지 찍으며, 반대매매 금액이 급증하곤 했다. 당시 반대매매 규모는 3월 18일 245억 원, 19일 260억 원, 20일 249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늘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위탁매매 미수금은 2000~3400억 원 수준이었다. 이달에는 최대 5600억 원을 기록해 2배가량 급증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큼 반대매매 금액도 급증한 셈이다. 오히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약 1~3%p 정도 낮다

시중 은행에서 돈줄이 막히자 증권사 신용거래를 찾는 투자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15일 기준 신용거래 잔고는 21조 296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에는 10조 원 규모에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터진 후 6조 원대로 줄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당국도 ‘빃투’ 광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산가격 상승이 실물경기, 소득 여건에 비춰볼 때 좀 빠르고 그 과정에서 차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는 흑시라도 예상치 못한 쇼크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인아 기자 lijh@

## NH투자증권 ‘언제 어디서나 해외송금’

NH투자증권은 언제 어디서든 해외로 달러 송금이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의 취급점을 통해 수취 상대방의 해외계좌 유무에 따라 2가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총 20개

국 대상으로 가능하며 수취은행코드,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수취인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도 해외빠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전세계 약 200여 개국에 실시간으로 최대 5분 안에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1일 2회, 1만 달러 한도)이며 연간 총 한도는 미화 5만 달러다. 송금 가능통화는



USD(미국달러)이며 특히 송금수수료는 송금액과는 무관하게 건당 5달러이다. 단, 해외빠른송금 받기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경진 기자 skj78@



“하나픽 서비스는 리서치 정보를 투자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손님들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하나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하나픽’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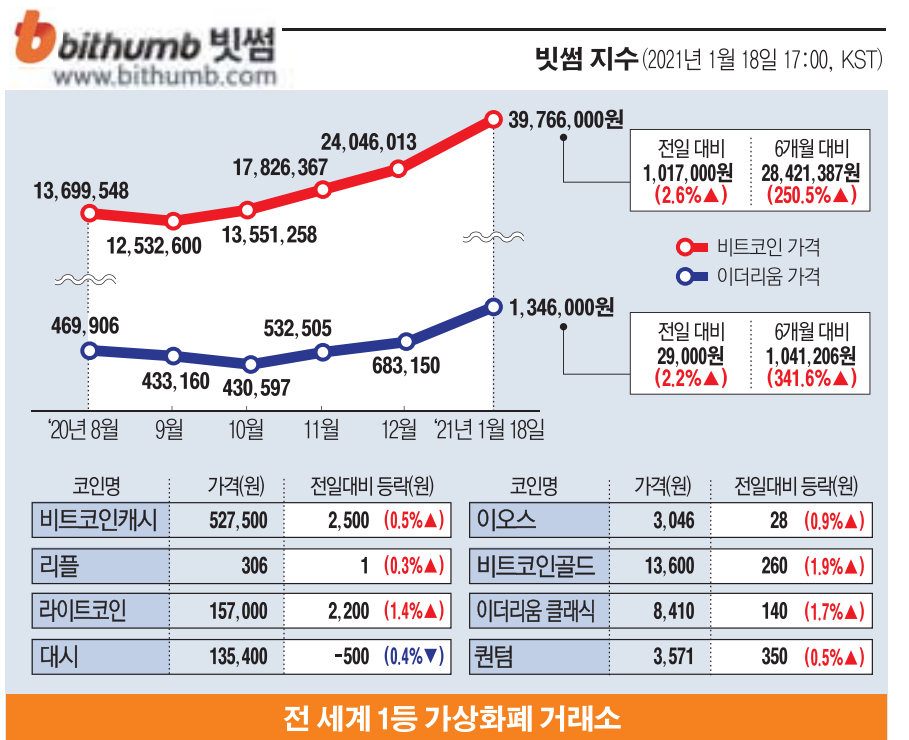
하나금융투자는 리서치센터의 투자정보 콘텐츠를 모아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든 ‘하나픽’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픽’은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딱딱한 보고서 형식을 벗어나 영상과 그래픽, 이미지 등 각종 시각자료들을 활용해 직접 만든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 아침마다 손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픽’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투자

에 도움을 준다. 손님 친화적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를 극대화해 증권 투자 입문자들까지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하나픽’은 하나금융투자 모바일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 ‘하나원큐프로’에서 무료로 신청해 볼 수 있으며, 하나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하나원큐’ 내의 생활뱅크 섹션에도 만날 수 있다.

최일용 하나금융투자 디지털본부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 서울 공공전세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한계

내일까지 전국 1만5000가구 청약  
월세부담 줄여 최대 6년 거주 '이점'

정부가 지난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공 전세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급 물량이 1만 가구가 넘어 물건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시장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공급 지역과 물량, 면적 측면에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지금의 전세난을 시원하게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18일 1만4843가구 청약 본격 스타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시흥간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1만4843가구다.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한다.

임대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있으면 퇴거해야 하지만 없을 경우 2년을 추가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는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가능하다.

◇서울 공급물량 전체 물량 중 단 1.2% = 공공 전세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크게 나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에 달한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정의 및 물량

**정의**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서울 물량 적고 아파트 아닌 다세대 경기도 건설임대도 소형 면적 집중 "중산층 전세난 해결엔 제한적일 것"

그러나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 풀리는 물량은 단 178가구에 불과하다. 모두 매입임대주택으로 송파구와 강동·도봉·구로·영등포구 등 서울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아닌 모두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채워졌다.

빌라시장으로까지 불뚝이 될 만큼 전세난이 심각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이 아닌데다 4인 가족이 생활할 만한 전용 59㎡짜리 면적의 주택은 단 2채 뿐이다. 경기권에서 나오는 건설임대주택 역시 소형 면적에 집중돼 실수요자가 원하는 면적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선 그나마 건설임대로 3949가구가 나오지만 역시 전용 59㎡형 면적을 찾는 건 쉽지 않다.

◇주거 취약계층엔 '가뭄에 단비'...전셋값·매매시장 안정 역부족 =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해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에 해당하는 신청자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1~3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전세 수요자들은 4순위에 포함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공 전세주택 공급이 주택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치솟고 시중 전세 물량이 워낙 적은 상황 이어서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양(공급 물량)과 질(주택 품질) 모두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역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세대주택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이 주거 약자의 전세난을 더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아파트 전세시장까지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1~2순위 취약계층에 우선공급된다. 따라서 3~4순위 자격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 넘어올 지는 의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 자체가 무의미하진 않지만 소득이 다소 낮거나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국민 절반 "양도세 완화를"

서울·2030 '찬성' 압도적 많아

정부·여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를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 10명 중 절반은 부동산 양도세 완화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폐지하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1%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은 23.0%, '어느 정도 찬성'은 27.1%였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한다'는 40.8%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는 23.7%, '어느 정도 반대'는 17.1%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다.

서울에서는 찬성 응답이 55.5%로 반대 35.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도드라졌다. 특히 30대와 20대의 '찬성' 응답이 각각 58.4%, 56.8%로 높았다. 반면 고령층은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60대는 찬성 35.0%, 반대 54.2%였고 70세 이상은 찬성 40.6%, 반대 51.9%로 집계됐다. 문선영 기자 moon@

##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한달새 6000만원 떨어져

# 서울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늘어

〈지난달 23.4% → 이달 35.1%〉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같은 단지·면적이라도 직전 매매보다 낮은 가격에 성사되는 거래가 늘고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4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거래 194건 중 직전 거래(동일 단지·면적 기준)보다 매매가격이 내려간 거래는 68건(35.1%), 높아진 거래는 114건(58.8%)이었다. 지난달에 체결된 2334건 가운데선 직전 매매가보다 가격이 올랐던 거래는 1704건(73.0%)이었고 하락한 거래는 546건(23.4%)이었다.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 국면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면적 84㎡형은 이달 5일 23억400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12일 최고가(24억 원)를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만에 6000만 원이 내려갔다.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 전용 53㎡형은 새해 첫날 17억8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최고가(18억 원)와 비교하면 2000만 원 값이 싸다.

강북지역에선 지난달 25일 3억7000만 원에 팔렸던 노원구 공릉동 시영3차라이프 전용 39㎡형도 이달 6일엔 그보다 2100만 원 내려간 3억4900만 원에 손바뀜

**직전 거래보다 실거래가 하락한 서울 아파트**  
※ ( )는 전용면적

|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84㎡) |            |  |
|-------------------------|------------|--|
| 2020년 12월 12일           | 24억 원      |  |
| 2021년 1월 5일             | 23억4000만 원 |  |
| 노원구 공릉동 시영3차라이프(39㎡)    |            |  |
| 2020년 12월 25일           | 3억7000만 원  |  |
| 2021년 1월 6일             | 3억4900만 원  |  |

이 일어났다. 성북구 돈암동 '동부 센트럴빌' 전용 80㎡형 매매가격도 11월 8억9000만 원에서 이달 6일 8억5000만 원으로 4000만 원 떨어졌다.

주택 거래도 감소 추세다. 신고일 기준 1월 둘째 주 주택 거래는 3086건으로 첫 주(3262건)보다 5.4%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감소 폭이 34.4%(633건→415건)로 더 컸다. 연휴가 긴 새해 첫 주는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추세다.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면 매수 수요가 강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개입되기 때문에 호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사례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채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      |          |       |      |        |       |
|------|----------|-------|------|--------|-------|
| 회계관리 | 기업전용 메신저 | 화상회의  | 메일   | 전자결재   | 웹오피스  |
| 인사관리 | 내PC 원격접속 | 웹스토리지 | 팩스   | 거래처 관리 | 명함관리  |
| 조직도  | 문서협업솔루션  | 할일관리  | 일정관리 | 노트     | Ted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창구, 웹발도,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 국민대 평창동 부지 매각 ‘제3캠퍼스’ 조성 백지화

국민대학교가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매각했다. 이로써 국민대의 캠퍼스 증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됐다.

18일 국민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며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했던 국민대 제3캠퍼스 부지를 지난해 5월 약 700억 원에 A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A 사는 2개월 후 해당 부지를 B 신탁회에 707억 원에 넘겼다.

국민대는 이번 거래로 450억 원가량의 매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대는 2007년 9월 캠퍼스 증설을 위해 서울 평창동 일대 1만4149m<sup>2</sup>

(약 4280평) 부지를 매입했다. 2015년 3월에는 제3캠퍼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인허가 문제에 부딪혀 답보상태였다.

국민대는 해당 부지에 제3캠퍼스를 건설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수익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종로구가 해당 부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라고 못 박으면서 제3캠퍼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대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시스템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 금액은 교육용 대체 시설 확보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설 기차표 비대면 예매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여파로 19~21일 100%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승객 간 거리두기에 따라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 4인 동반석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18일 동대구역에 설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공수처장 후보자〉

## 김진욱 인사청문회… 주식거래 의혹 충돌 예고

김학의 논란 입장 밝힐지 주목  
세 차례 위장 전입설 해명할듯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세간의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계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차



가 확연한 만큼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와 위장 전입 등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 회사 주식 5813주를 주당 8300원에 샀다. 이후 2530주를 추가로 매수해 총 8343주를 보유 중이다.

추가 매수 시점과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사 주가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100원에서 3만3900원까지 변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매수 단가는 최초 매입가인 8300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회사의 현재 주가가 1만 원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

의 시세차익은 사실상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김 후보자는 이외 진단 키트 회사인 씨젠과 수젠텍 주식도 보유 중이다. 아울러 유한양행과 일양약품, 진원생명과학 등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은 바이오 관련주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위장 전입 의혹은 야당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김 후보자는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를 이전했다. 야당 측은 부동산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재산상의 이득 등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기영 기자 pgy@

## 친모에게 살해된 8세 딸 ‘사인불명’

경찰 “정밀 감식 예정”

40대 어머니에게 살해된 8세 여아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친모 진술 등을 토대로 A 양의 사망 시점을 이달 8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 양은 15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의 어머니 B(44) 씨가 이날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 데 따

른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 씨와 숨진 A 양을 발견했다. B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A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A 양의 친부인 C(46) 씨는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는 A 양이 숨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영 기자 pgy@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sub>yd</sub>**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sub>yd</sub>**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이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주)뱅골프코리아 | 대표전화 1544-807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 [www.banggolf.co.kr](http://www.banggolf.co.kr)



# 케이뱅크 은행장에 첫 비KT 출신

## 서호성 한국타이어 부사장 내정

임추위, 3대 은행장 최종후보로  
삼성생명 시작으로 카드·증권...  
금융산업 전반 풍부한 경험 쌓아  
전략·마케팅 전문가로도 정평

서호성(사진) 한국타이어애편테크놀로지 부사장이 케이뱅크 3대 은행장 최종 후보에 추천됐다. KT 출신이 아닌 인사가 케이뱅크 행장으로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뱅크는 1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내외부 후보 인사에 대한 치열한 토론 끝에 서호성 한국타이어애편테크놀로지 부사장을 3대 은행장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서류 접수, 자격 심사, 평판 조회, 최종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차기 CEO(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신용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대카드와 한국타이어 등에서 전략과 마케팅 분야를 총괄한 업계 전문가로 꼽힌다.

1992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Bain&Company 이사, 현대카드 전략기획실장, 현대카드마케팅본부장, HMC투자증권(현 현대차증권) WM사업본부장, 현대라이프생명보험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디지털 금융사업 모델 개발을 주도했고 자산운용, 보험, 카드,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업 전략 부문을 진두지휘하며 좋은 성과를 냈다. 2003년 현대카드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으며 '신용카드 대란' 파동으로 위기에 처

한 현대카드 턴어라운드(Turn Around) 전략을 수행해 결국 흑자 전환까지 이뤄낸 주역으로 꼽힌다. 2005년엔 현대카드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M카드 상품성 개선 및 고객 니즈 따른 '알파벳 카드' 마케팅 도입 등으로 기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한편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과 HMC투자증권의 전자 기획을 담당하며 인수합병(M&A) 이후 조직 안정화를 주도하면서 성장 기반을 닦았다. 이후 한국타이어에선 전략기획부문장 및 미주본부장, 전략&마케팅총괄 부사장 등을 지내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다.

케이뱅크 임추위 관계자는 "서 후보자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마케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며 "여기에 투자 유치 및 M&A, 글로벌 감각까지 갖춰 추가 증자와 '퀀텀점프'를 모색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차기 선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열릴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케이뱅크 3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서지연 기자 sjy@

## 떠나는 트럼프, 안보 고위직에 충성과 '알박기'

### NSA 법률고문에 공화당 출신 마이클 엘리스 임명 성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사흘 남기고 안보 요직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는 데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전날 미 국가안보국(NSA) 법률 고문에 공화당 당직자 출신 마이클 엘리스(사진)를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약 두 달 만의 승인이다.

NSA 측은 "어제 오후 엘리스가 제안을 받아들였고 NSA는 그를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NSC 변호사로 일했던 엘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논란 중 하나였던 존 볼턴 회고록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출시킬 예정이었으나, 엘리스가 이를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법률 고문 자리에 세 명의 후보자가 올랐고, 이 중 엘리스는 최고 득점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알려진 탓에 최종 임명됐다는 설명이다.

엘리스가 맡게 된 법률 고문은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직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가 어려워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다.

CNN방송은 "엘리스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과 중 하나인 테빈 누네스 하



원 의원의 수석 고문으로도 일했다"며 "공무원직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그를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같은 충성파의 공무원직 임용은 '알박기'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케빈 나, 소니오픈 우승...PGA 5승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한 케빈 나(38·한국 이름 나상욱)가 아내와 딸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최종 스코어 21언더파 259타를 기록해 1위에 오른 케빈 나네 PGA 통산 5승을 달성했다.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 한온시스템 CEO에 성민석 사장

한온시스템은 성민석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정원 전임 CEO는 부회장에 선임됐다.

이에 따라 3인 각자 대표집행 임원 체제는 성민석, 너달 쿠추카야 2인 체제로 바뀌게 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 화우, 박세춘 前금감원부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특수은행검사국장,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거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김대영 기자 kdy@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두희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정민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유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김남희

◆교보증권 ◇신임 〈본부장〉 △ECM본부 오세민

◆라이나생명 ◇임원 영입 △김기성 전무 대외협력부 △이종석 전무 정보기술부

부 △김한상 상무 TM제휴영업본부

◆화승그룹 ◇화승소재 △사장 허성룡 사장 △이사 강보성 이사 △이사부장 윤진민 ◇화승네트웍스 △사장 박동호 △이사부장 이승환 ◇화승R&A △부사장 이석현 부사장 △전무이사 김형진 △상무이사 임팔수 △" 정도호 △이사 김성태 △" 박종수 △이사부장 박용우 ◇회장실 △이사부장 김정식

◆누리텔레콤 ◇전무 승진 △재무관리실 조명관 △해외사업부 김경희 △전력 IoT사업부 정병걸 △영업본부 T-PM 그룹 윤국원 △전략기획실 한정훈 ◇상무 승

진 △전략기획실 기획팀 김태진 △" 김민수 ◇이사 승진 △경영지원부 최은정 △제1연구소 조규석 △제2연구소 김대환 △스마트에너지사업부 백준선 △영업본부 A-PM 그룹 박제동

◆바이오니아 △올리고 연구소장 김병현

◆메가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발행인 홍성주 △편집인·편집국장 류수근

◆더원일보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 홍선 △편집국장 이상엽 △총무국 부국장 가보현 △서울취재본부장 최찬희 △경인취재본부장 조태현

## '롯데 창업주' 故 신격호 명예회장 1주기 신동빈 회장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낼 것"



신동빈 롯데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1주기 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지주

### 22일까지 온라인추모관 열어

롯데는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1주기를 기리기 위해 온라인 추모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는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의 추모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추모식 대신 온라인 추모관에 신 명예회장을 추모한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신 명예회장의 일대기와 어록 등이 게재돼 있다. 10분 분량의 추모 영상에는 맨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일구고, 모국에 투자해 식품, 관광, 유통, 중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한 신 명예회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하셨다"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추모 영상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올주군 고향집 실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

개되기도 했다. 수십 년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옷, 신발, 가구, 소품 등을 본 임직원들은 "신 명예회장의 겸소하고 소탈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전 이사장은 추모영상에서 "어린 시절 낮은 타구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늘 고국과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셨다"며 "그런 마음이 롯데라는 그룹을 일구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추모관에 버클리 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 강상수 씨가 추모 연주를 펼친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각장애인인 강 씨는 2013년 버클리 음대 시험에 합격했으나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병행하던 힘든 상황일 때 신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롯데장학재단에서 3년 동안의 유학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해 줬다. 강 씨는 신 명예회장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인이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했던 것을 기념하며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편곡해서 연주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부음

### '5·18 광주' 진실 알린 정형달 신부 선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정형달 바오로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78세.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정 신부는 1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43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1969년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1980년 6월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고자 낸 '광주사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명은 전국 모든 천주교 교구에 전달돼 그해 5월의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됐다.

장례미사는 19일 오전 10시 염주동 성당에서 사제단과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신자 참석은 제한된다.

### MBC·경향신문 사장 지낸 이환의 前의원

전북지사와 MBC·경향신문 사장을 지낸 이환의 전 국회의원이 11일 별세했다고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18일 전했다. 향년 90세. 이 전



의원은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고인 유언에 따라 장례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만 참석해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전남 영암 출신인 고인은 광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정치부장, 전북지사, MBC와 경향신문 사장,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백제문화연구원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1990년 학교법인백암학원(백제예술대학)을 설립했으며, 14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도 몸담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전순남 씨와 아들 기훈·기범 씨, 딸 은주 씨가 있다.

▲최규심 씨 별세, 신현호(신소아청소년의사협회장)·현준(한국신용정보원장) 씨 모친상, 최윤애·손정민(글로벌퓨처그룹 대표) 씨 시모상 = 18일, 강원도 동해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33-535-3001

▲서승구 씨 별세, 서의식·교식·연식·인자·귀순·성숙 씨 부친상, 윤종석(논산계룡농협 상임이사)·장영식·이홍우(전기신문 부사장) 씨 장인상 = 18일, 논산 황산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20일 오전 9시, 041-733-4447

▲박아희 씨 별세, 김승환(매일경제TV 경인총국 대표) 씨 장모상, 최정숙 씨 모친상 = 17일, 경북 김천 태산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54-435-6119



#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변화막측(變化莫測)한 시대다. 대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해 모든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백가쟁명식 논쟁을 촉발해 여론을 어디로 몰고 갈지 예측하기 힘들게 한다.

IBM에 따르면 이미 2017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자료의 양은 하루에만 2.5 쿼틸리언(quintillion) 바이트에 달했다. 쿼틸리언은 조의 1만 배, 즉 100경이다. 이 정도의 정보를 저장 용량 650메가바이트인 CD에 담으려면 무려 38억 개가 필요하다

고 한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쏟아지는 정보량의 100만분의 1인 3테라바이트(terabyte)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이 간극은 정보 습득 과정을 지극히 단순화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정보 획득은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여론 조성에 악용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달 통일부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설명자료에 “거쉬먼 NED 회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 데스크칼럼

박 성 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밝힌 바 있다”고 썼다.

하지만 거쉬먼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전단 규제에 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는데 통일부가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문장만 뽑아 썼다. 결국, 거쉬먼 회장은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고,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호의적 국제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외교부도 오역을 빚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 내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복측의 무력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회자 발언을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두 부처 모두 의도적인 오역이나 짜깁기 편집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이 뒤늦게라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민들은 꿈쩍 없이 왜곡된 정보를 체득했을 것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보의 양은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오보를 가려내기 힘들게 한다.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착각과 오만에 빠진 ‘가짜 전문

가’가 넘쳐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에서 기사 제목만 보고 ‘뒤로 가기’를 터치했음에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도 그 기사 읽어서 알고 있어’라고 답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맹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통일부 행보를 보니 이 판단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통일부는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건(약 271억 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불과 이틀 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을 향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8차 당대회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길’, ‘3년 전 봄날’,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조선 시대 사금파리 하나로 고려청자 10개 정도는 똑딱 빚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과잉 신념과 맹목적 믿음은 인지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성까지 갇아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재계와 소통했다는 정부와 여당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탄소리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과잉 신념에 매몰된 정부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vicman1203@

## 사설

###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대통령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임기 말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및 신규택지 개발 등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개발의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단축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고민하겠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지 않고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논란이 큰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관련, “충분한 양이 빨리 도입되고 있어 계획보다 이른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방역의 낙관론을 펼쳤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이 갖는 궁금증을 소상히 풀어주고, 명확한 비

전과 정책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소통에 미흡하고, 현안에 대해 확고한 정부 입장과 문제의 개선 의지가 제대로 밝혀진 것 같지 않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수요가 예측을 벗어나 급증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했고 집값을 부추겼다”며, 획기적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반(反)시장 부동산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빚는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편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심각한데 “제도화는 어렵고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쟁점의 핵심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문제에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북핵의 위협이 가중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근 방식과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1년여 남은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 노트북을 열며

김 면 수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일부 사람들은 표절과 모방의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해서 사용해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한 후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엄밀히 구별된다. 또 패러디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다소 표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는 구별된다.

표절과 모방 그리고 패러디는 일반 성인이라면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위 논문과 문학작품에 대한 표절 시비 의혹은 연중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가수 홍진영과 스타강사 설민석이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적잖은 파장을 안겼다. 한 매체에 따르면 홍 씨와 설 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인 ‘카피킬러’로 확인한 결과 표절률은 각각 74%와 52%

### 표절은 절도다

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현장에선 표절을 20% 미만을 기준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후 홍 씨는 대학 석사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조치 절차에 들어갔고, 설 씨 또한 현재 해당 대학교에서 석사 논문 표절 문제에 관해 조사 및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이 외에도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표절 의혹 사건이 있다. 2018년 백마문화상을 받은 단편소설 ‘뿌리’를 썼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민정 씨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소설 ‘뿌리’의 본문 전체가 무단 도용됐으며, 내 소설을 도용한 분이 2020년 무려 다섯 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단 도용자로 지목된 이 남성은 ‘뿌리’를 그대로 베낀 응모작을 통해 제16회 사계 감장생 문학상 신인상과 2020포천 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에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을 받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남성이 소설뿐만 아니라 신문 칼

럼과 인터넷 게시물 등 다양한 타인의 글과 아이디어를 도용해 각종 형태의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었다는 제보가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하물며 이 남성은 공모전을 통해 받은 상금을 차곡차곡 모아 자동차를 샀다고 페이스북에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십만 문학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남의 작품을 표절해 수많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작품을 심사한 이들 또한 어떻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작가에게 있어 하나의 작품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다. 문학뿐만 아니라 논문 또한 마찬가지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낸 누군가의 작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표절하는 행태, 이는 비단 영혼이 없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표절은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절도 행위이고, 이는 어떤 식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earand76@

## 특허, 특!

### 기업의 특허 유지관리 전략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특허를 하나라도 더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특허에 관련된 비용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실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규 특허출원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등록 특허권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신규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전략적인 특허 유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내 특허팀에서 매년 등록을 유지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등록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자사 제품에 적용된 특허는 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자사 제품에 미적용된 특허는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자사 또는 경쟁사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특허를 유지해야 한다. 즉, 미래의 활용성

을 평가하여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에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속하는 특허는 활용성이 높고 사양산업 분야에 속하는 특허는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단계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각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허의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비중이 큰 국가의 특허는 계속 유지하고, 매출 비중이 극히 낮거나 해당 국가의 특허 권리범위가 매우 협소한 경우는 포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유지하더라도 유지료 납부 시 청구항별 포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특허 청구항 개수가 10항인 경우라면 10년 차부터는 79만 원, 13년 차부터는 91만 원의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5항을 포기하는 경우 약 27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매우 작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보유 특허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태영 LNB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의 시작**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GS칼텍스**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플러스'를 시작합니다



##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